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9호)

'96. 2. 6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5. 11. 23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95. 11. 25
- 다. 상 정 일 자 : '96. 2. 5
- 라. 위원회 개최 : 제49회 임시회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회의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국장 이 상 하)

가. 제안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5. 4. 1)에 따라 구 조례중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을 보완하고 조문구조 및 자구를 합리적으로 수정·정비하여 서울시 자치구 조례준칙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1)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시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 삭제
(안 제9조제2항1호)
- 2)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삭제(안 제16조)
- 3)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양식 등 보완 (안 제22조)
- 4)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 별표4 제12호)
- 5) 기타 조문구조 및 자구수정(안 제2조 및 제5조 제2항 등)

다. 관련근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 충 빈)

가 검토내용

- ° 관련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시키고 징수절차등 조문을 보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임.

나 검토결과

-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94. 11. 14) 및 시행규칙(95. 4. 1)의 개정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부과기준등의 조례 반영은 당연하다고 봄.

2) 검토의견

제출안	검토의견	비고
	° 서울특별시시초구조례 제 호	누락되었음
° 서울특별시시초구조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u>조례</u> 개정조례(안)	----- <u>조례</u> 개정조례(안)	전면개정안 21개조문중 15개조문개정
제2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②구청장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한다)이 분뇨처리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2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②구청장은 ----- ----- 필요로하는 경우 분뇨 및 축산 -----	(삭제) 당해관할구 역안의
제3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①구청장은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규칙 제4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한다)의 내부청소가 연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①----- 제45조 ----- 제4호 및 ----- 규정에의하여 정화조, -----	(삭제) 규칙, 관할 구역 안의

제출안	검토의견	비고
제4조(정화시설내부 청소통지) ①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화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이상 청소의무 사항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정화시설내부청소 통지) ①----- 규정예의하여 정화시설의 ----- ----- 늦어도 내부청소시기 1개월전에 -----	(삭제) 관할구역안의 (추가) 늦어도
②생략 ③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안내서 및 족구서발송을 정화조청소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 청소안내서 및 족구서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삭제) 관할구역안의
④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정화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삭제) 관할구역안의 시민-구민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도 같음
제9조(가축 사육의 제한등)①-----	제9조(가축사육의 제한등)①(제출안과 같음) ②(생략)→②(현행과 같음)	②누락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① ② 다만, 시민의 야간청소요구가 있을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현행과 같음) ②----- 다만, 구민의-----	*징수*누락 시민→구민
제17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등) ①생략) ② ③구청장은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등) 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③----- -----구민에게----- -----구민의-----	시민→구민
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 ----- 인정될 때에는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제출안과 같음)	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등의 의무) ①----- ----- 인정될 때에는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제출안과 같음)	*추가 정화조 청소업자 소유자 관리자

제출안	검토의견	비고
<p>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①구청장은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적발 또는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에 별지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p> <p>④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중벌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⑥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p>	<p>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①구청장은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후 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중벌과 과태료의 기준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별지제3호서식)와 과태료 납부 고지서(별지제 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을 확인한 후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8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④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의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⑤(개정안과 같음)</p> <p>⑥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독촉을 받은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일 에 관한 일 반적인 사 항을 1개조 문으로 나열</p>

제출안	검토의견	비고
<p>㉗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확인 후 7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p> <p>㉘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㉙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p>		
(별표 2)(제출안에는 없음)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부과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부과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제12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p>(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p> <p>가. 오수정화시설 B.O.D (mg/ℓ)</p> <p>단, '96. 7.1일부터 아래의 2개항목 기준적용</p> <p>B.O.D, S.S (mg/ℓ)</p>	<p>(별표 4) (제출안과 같음)</p> <p>가. 오수정화시설 B O D (mg/ℓ)</p> <p>단 -----</p> <p>B O D,SS (mg/ℓ)</p>	이하같음
(별지 제5호 서식) (제목)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납부독촉(최고)장검 영수증"	OCR카드상 누락됨

다. 관련법규 (생략)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시행령은 '94. 11. 4 시행규칙은 '95. 4. 1 개정되었는데 조례개정안이 늦게 제출한 이유는 → '95. 8. 23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조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출하다보니 늦게 되었음.

- 조례개정이 늦게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나 불이익은 없었는지, 처리업자의 피해나 불이익을 없었는지, 지도단속은 어떠했는지 → 벌칙이 강화되므로 처리업자등의 피해는 없었다고 봄.
-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조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지 → 심사를 하였으며 검토서에 관찰구역이란 5개항등 충분히 사전 검토가 안된것 같으며 재고 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음.
- 분뇨처리 시설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정화조의 각형(대형콘크리트조)의 설치에 건축업자가 하는지, 정화조 업자가 하는지 → 건축허가시 일괄처리되며 정화조 시공업자가 시공하게 되어 있음.
- 정화조시공업자는 등록사항이나, 허가사항이나 → 등록사항임.
- 각형은 건축업자가 시공하고 면허를 대여하여 준공하는데 면허기준은 → 수질환경 기사 2급이 있으며 준공후 1개월내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검사하고 있음.
- 각형정화조는 부당·부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 건축과에서 중간 검사를 하고 있음.
- 제2조에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유지 관리해야 하며 가축사육 허용 범위는 → 양재1,2동과 내곡동만 사육이 가능하며 내곡동에 양축농가가 있으나 환경상 문제는 없음.
- 처리기본계획은 → 연초에 수립되어야 하는데 수립이 안되어 죄송하고 조속히 수립 하겠음.
-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민선시대에도 공직자의 자세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조례안의 심사가 정확히 심사,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도 안 제20조와 같이 부적합 하여 전문위원이 지적하였는데 이를 바로 잡도록 지적함.
- 별표4 1의가, 2에서 BOD와 SS가 강화 되었는데 기존 정화조에도 적용 하는지 '96. 7. 1 이후만 적용하는지 → 환경법규가 강화되어 기존분도 적용하게 됨.
-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의 납부의 승계의무가 삭제되는 것은 → 납부의무자는 건물주가 아니고 사용한 자임.
- 종오니의 재투입은 → 청소후 재투입 되어야 함.
- 분뇨 차고지의 허가기준은 → 허가시와 현재 차고지와 같은지 확인후 일치하지 않으면 변경등 조치할 수 있음.
- 분뇨차의 탈취시설 부탁은 → 부착되어 있음.
- 양재천변에 있는 차고지는 → 있다. 94년 재계약시 변경하였음.
- 우리구에 등록된 처리업자는 → 정화조 2개업소, 분뇨 1개업소가 있으며 현황은 서면 제출 하겠음.
- 안 제9조 신원증명서의 삭제로 효과와 통제방법은 →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구에서 신원조회로 같음하고 있음.
- 수수료의 납부승계가 안될때 체납이나 불징수가 된다고 보는데 → 세입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며 청소시 납부조치 하고 있음.

- BOD, SS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을 나타내는 것임.
- 정화조 재질은 KS규격인지, 규격미달, 비KS제품등이 난무하고 있고 부실 시공 설치되고 있는데 →등록업자관리를 하고 있으나 건축과에서 일괄조치 하고 있으며 규격·재질이 불량한 것은 시공상 문제이고 수질은 준공한달 후 검사하게 되므로 시정될 것임.
- 난립되어 있는 시공업자, 제품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용의는 →앞으로 67개 시공업자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강화 하겠음.
- 아파트 단지내의 정화조 처리는, 약품처리 하는가 →년1회 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행되고 있음.
- 정화조 처리업자의 행포를 시장해야 하지 않는가 →상위법에 구체화 되어 있고 벌칙이 강화된 내용이며 시정하겠음.
- 조례등 법규가 주민위주가 아니라 통제나 행정편의위주로 되어 있는게 아닌가 →건물 1000㎡, 200인 사용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음.
- 수거처리업자의 탐요구, 과당요금등 부당한 사례가 있는데 시정할 용의는 →당연히 처벌 할 수 있으며 법체계상 랑을 속이거나 요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함.

5. 토론회 및 토론회지

- 수정동의안 발의 — 재청 — 가결
- ※ 수정동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수정안과 같음.

6. 수정안의 요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2. 5 총무재무위원장
- 나. 수정이유 : 조례체계 및 내용의 일부를 바르게 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1개조문에 정리
- 다. 수정 주요골자 :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수정가결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예산조치 : 없음
- 나. 연석회의, 공청회등 : 없음

10. 체계자구 정리내용 : 수정안에 반영